

독자칼럼

위대한 희망의 산실이 될 정읍 장학숙

정읍 장학숙은 희망의 산실이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희망이다.

그들은 밝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성취해야 한다. 사회의 역할은 그들이 꿈을 이루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그게 좋은 사회이고 일 잘하는 자치단체다.

최근 인양에 정읍장학숙이 개관됐다. 이것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정읍 대학생들을 위한 학습과 기숙을 위해 지어졌다.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하다.

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재력이나 환경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지방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방에 사는 청소년들이 그 곳 지방대학을 나와도 취업과 승진 등에서



정상섭

정읍시 초산동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의 지방분권도 아직은 먼 얘기다.

지방대 출신의 불이익 또한 여전하다.

그래서 형편이 힘든 집에서도 큰 무리를 해가며 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그동안 농촌 소도시 학생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과 높은 주거비용으로 수도권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난이 청소년들의 꿈을 꺾고 배움의 한을 만든 것이다.

이제는 개인의 비극이자 사회 발전

의 해악이다.

다행스럽게도 정읍시는 국가가 풀지 못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 장학숙을 짓는 큰 일을 했다.

그래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헌법상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답들을 내놓았다.

이제 돈 때문에 수도권대학을 갈 수 없다는 말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다.

장학숙은 청소년들의 희망의 등대이자 꿈을 이루어 가는 사다리가

될 것이다.

이 시설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훗날 그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로 개인의 인력만 쫓지 않고 공익적 가치와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갖아야 한다.

최근 경제의 양극화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한다. 자녀의 성공 여부가 부모의 사회 및 경제적 위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배려해 가난해도 능력과 소질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야 한다. 이것이 좋은 국가이자 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이 장학숙이 개관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을 넘었다.

시민과 출향인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 정읍장학숙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미래와 정읍 발전의 위대한 희망의 산실이 될 것이다.

독자제언

주운 물건을 가져갈 경우도 '절도죄' 성립

은행에 들렀다가 다른 사람이 현금 인출기에 두고 간 현금이나 지갑 등을 본적 있나?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습득을 한 것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주운 물건을 가져갈 경우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순간적인 욕심으로 돈을 가져가지만 대부분의 현금인출기 앞이나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금방 신원을 파악할 수 있어 쉽게 달리기 잡히게 된다.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길거리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이나 돈을 가져갈 경우 적용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1년 이하

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된다.

주운물건이 절도죄가 되는 비슷한 사례로, 담주장이나 택시 안에 있는 손님의 유실물들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지라도 사실상 담주장 주인 또는 택시 운전사의 관리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져 가면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TM기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로 돈을 찾아 놓고 그대로 돌아서거나 들고 온 지갑을 놓고 오는 사람들도 종종 발생하여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순간의 욕심이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이 놓고 간 돈이나 금품은 은행에 맡기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란다.

최경주 익산경찰서 중양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진화하는 보험사기 예방법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손목치기, 발뻐기, 조직형 사고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손목치기는 보험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을 뻐어 밀러 등에 부딪힌 뒤 부상을 입었다며 선량한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타내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은 발뻐기,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 도로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비취 밑에 발을 감작기 내밀어 녹과 하도록 한 뒤 쓰러지는 방식이다.

도로상에서 손이나 발등 신체를 이용한 이 같은 수법의 공통된 특징은 경미한 사고에 그친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행자 사고에 대해 과실 책임을 지는 운전자들의 위축된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차량으로 상대 차량이나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하지만 최근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변형된 형태도 등장했고, 가족끼리나 친구지간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거나 차량 대신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건도 등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험 사기를 예방하려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다

또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 보다는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을 통해 사고처리를 한다면 보험사기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덕진 김제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설

전북의 쌀이 대한민국 명품 쌀

전북의 쌀이 대한민국 명품 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번에 '2016년 대한민국명품 쌀 선정 평가' 행사를 했다. 그 행사의 자리에는 전국의 1천7백개의 쌀 브랜드가 출품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수 명품 쌀 31개 품목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전북의 쌀이 7개나 되었다.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들 망각해버린것 같다. 그 자랑스러운 기록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해야겠다. 도내 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이 같은 주문은 지난날 여러 번 했던 바이다. 그런데 어찌될 일인지 아직 그 변화가 생각처럼 뚜렷하지가 않다.

전북의 쌀이 대한민국 명품 쌀이다.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명품 쌀들에 대해 상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판매자들은 전북의 쌀이 타 지역의 쌀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기본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나 도내 소비자들 이 구매 기회를 많이 가질 리 없다. 지금 이 지면을 통해 도내 쌀에 대한 판매와 소비 촉진을 말하고 있거니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확한 정보 공유가 있어야겠다. 그만큼 전북의 쌀은 우수함이 여

러 번 입증되었던 터이다. 그것도 단순히 우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쌀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 여러 번 보도되었다.

해마다 있었던 품평회로 전북의 쌀이 우수함을 입증했지만 그게 망각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나름의 판매 전략이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면서까지 과거의 판매 방식을 고집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향토의 브랜드 쌀들이 해마다 품질의 우수함을 입증해 명품 반열에 명함을 내놓은 지 오래됐지만 그 사실을 도내 일반 소비자들 중 에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며 서울 등지의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 들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향토의 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판매와 구매가 활발할 터이다. 그리고 하고픈 말이 더 있다. 도내 농산물 구매가 일반 시민들만의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 쌀을 구매할 때마다 도내에서 생산된 것인지 다들 확인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인재 채용 말만 요란해서야

지역 인재 채용이 필요한 오늘이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 소리만 요란하다. 말로는 지역 인재 채용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맹탕이다. 도무지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 진정성이 없다. 이렇고도 웰빙 고장 운운하면서 지역이 발전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말해야겠다.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활발해야겠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에 대해서 공감은 하면서도 그 후 그에 대한 실행이 없으니 이상한 노릇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실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 대학을 나온 지역의 인재들을 위해서 먼저 짚어볼 것이 있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에 대한 중앙 정부에 대한 건의가 중요하기는 해도 그게 언론 플레이용이거나 그때 그때 분위기에 따른 구색 갖추기 수준 이라면 곤란하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 네 곳 중 세 곳이 지역 인재 채용

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주현 의원이 최근에 기획재정 부로 부터 보고 받았다는 내용을 보니 그렇다. 청년 인턴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더니 하는 지적이다. 세 기관은 전기안전공사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했으면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150명의 인턴 중 1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87.3 %의 전환율을 보였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전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의 모든 기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도내 근로자 중에 40%가 넘게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고용 현실이 이런데도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일자리 마련과 관련해 지역 민심을 달래는 식의 발표는 합당치 않다. 지역 인재 채용의 중요함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전북도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